

미세먼지 근본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

의안 번호	2463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4월 2일

발 의 자 : 강감창, 김진수, 남창진,
박마루, 박중화, 송재형,
신건택, 우미경, 이상목,
이석주, 이해경, 주찬식 의원
(12명)

1. 주문

-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계속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하여 시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놓는 대책은 기존의 대책을 답습하거나 그 효과 또한 미미하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, 서울 시의회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함

2. 제안이유

- 환경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대책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
- 그러나 2012년도 이후 미세먼지(PM-10) 농도는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$45\mu\text{g}/\text{m}^3$ 정도를 오르내리고 있고 초미세먼지

(PM-2.5) 역시 개선되는 추세라고 보기 어려움

- 그동안 환경부나 서울시가 발표한 대책은 기존의 대책을 답습하거나 그 효과 또한 미미함. 일례로,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원 별 비율은 난방·발전이 39%로 가장 높고, 교통이 37%, 비산먼지가 22%, 기타가 2%이지만, 서울시는 2018년도 미세먼지 관련 총 예산 2121억7천6백만원 중 교통 부문에만 92%에 달하는 1963억4천8백만원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을 세움
-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은 이와 같은 미세먼지 정책이 비효율적이며, 미세먼지 관련 정책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어 획기적인 미세먼지 근본대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한 실정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대기환경보전법」
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
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

나. 기타사항 : 없음

4. 이송처

가. 국회 : 환경노동위원회

나. 정부 : 환경부

5. 첨부 : 미세먼지 근본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

미세먼지 근본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

-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계속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하여 시민들의 생활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.
- 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아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몸속에 직접 침투해 천식과 폐질환은 물론 뇌졸중, 치매, 파킨슨병 등 많은 질병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세계보건기구(WHO) 산하 국제암연구소(IARC)는 미세먼지를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데 고농도 미세먼지는 영유아 및 어린이 같은 건강 취약계층에 더 위험하다.
-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대책은 기존의 대책을 답습하거나 그 효과 또한 미미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.
- 서울연구원의 2016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원 별 비율은 난방·발전이 39%로 가장 높고, 교통이 37%, 비산먼지가 22%, 기타가 2%이지만, 서울시는 2018년도 미세먼지 관련 총 예산 2121억7천6백만 원 중 교통 부분에만 92%에 달하는 1963억4천8백만 원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을

세웠다. 반면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난방·발전 부분에는 겨우 2%의 예산만을 책정했다.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, 미세먼지 발생요인 별로 보다 신중하고 과학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.

- 단적인 예가 바로 2018년 1월 15일, 17~18일에 걸쳐 사흘 동안 145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서울시의 대중교통비 공짜정책이었다. 서울시는 시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아 대중교통 무료 운행 시행 직후 두 달도 되지 않아 슬그머니 폐기했다.
- 이와 같은 비효율적 미세먼지 정책은 시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. 2018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민 1,000명을 대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,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소요 현황 대비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해 ‘효과가 적다’는 답변이 71.4%를 차지하였다. 이에 비해 효과가 크다는 응답은 겨우 13.8%에 그쳤다.
-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답변이 68.2%였으며, 서울시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지속하는 것에 60.3%가 반대하였다. 아울러 반대하는 시민의 82.6%가 ‘개편이 시급하다’고 응답했다.

- 이에 서울시의회는 중앙정부 및 국회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, 미세먼지 유발요인 별 예산책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미세먼지 관련 특별대책팀(TF)을 마련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.

2018. 4. 2.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